

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(안)

2020. 3.



관계부처 합동

차 례

I. 추진 배경	1
II. 2019년 추진성과 점검결과	2
1. 주요 성과	3
2. 한계 및 문제점	5
III. 개선·보완 방안	6
IV. 향후 계획	7
[붙임1]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 주요내용	8
[붙임2] 포용국가 사회정책 영역별 주요 성과	10
[붙임3] 포용국가 사회정책 2020년 주요 추진 계획	12

I. 추진 배경

- 정부는 압축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'혁신적 포용국가'로의 패러다임 전환 선언(18.9.6)

※ 대통령 주재 '포용국가 전략회의'를 통해 「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」 발표

-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임기 내(~'22) 사회정책 로드맵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 발표(19.2.19)

- 동 추진계획 시행 초기 단계에 원활한 과제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과제의 추진현황 등을 1차 기 점검

※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」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(19.6.28.)

- ☞ 발표(19.2) 이후 1년여 경과 시점에서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상의 개선·보완방안 등을 마련하여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도모

<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 주요 내용 >

- '전 생애 기본생활보장'을 목표로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'삶의 영역'과 '생활 기반'으로 구분하여 9개 영역으로 세부 분류, 관련 정책·사업 제시

구분	영역	주요 과제
삶의 영역	돌봄	• (아동) 국공립 유치원·어린이집 확대,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• (장애인·가족)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,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
	배움	• (교육비) 고교무상교육 도입,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• (인재양성) 과학기술·ICT 인재성장 지원, 직업훈련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
	일	• (일·가정) 양립 지원 확대,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강화 • (일터혁신·질개선) 공공기관 여성 고위직 확대,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
	쉼	• (일·여가)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, 근로자 휴가 지원 • (여가환경) 문화기반시설(공공도서관 등) 건립 지원, 문화격차 해소
	노후	• (인생 2모작 지원)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, 노인 문화·체육 활성화 • (건강·돌봄)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,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
생활 기반	소득	• (고용안전망)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,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가입 지원 • (사회안전망) 아동수당, 기초연금·장애인연금, 기초생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
	환경·안전	• (환경) 미세먼지 감축,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·알려리 강화 • (안전)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,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·보호 확대
	건강	•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, 지역 간 의료격차 축소
	주거·지역	• 주거지원 강화, 도시재생 뉴딜 연계 생활서비스 시설 공급, 농촌 취약지역 주거환경 개선

II. 2019년 추진성과 점검결과

< 점검 개요 >

- ❖ 「추진계획」 상 71개 세부과제 대상으로 실적 점검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확인 등을 통해 '19년 성과 모니터링 실시

< 성과지표 점검 개요 >

- ❖ (대상) 71개 세부과제 구성 성과지표 총 86개 중, '19년 말 기준 성과확인 가능 지표 점검(67개)
※ 나머지 지표들은 성과 확인 시기 등이 달라 추후 모니터링 예정 (예: 성폭력 실태조사, '20.上)
- ❖ (기준) ①초과 달성 ('19년 목표치 대비 달성률 100% 초과) ②달성 (달성률 100%) ③보통 (90% 이상) ④미흡 (90% 미만)의 4단계로 점검

- ❖ 성과지표 점검 결과, 대부분 '19년 목표치 대비 90% 이상 달성

분류	개수	해당 지표(예시)
초과달성 (달성률 100% 초과)	41개	남성 육아휴직자 비율(21.2%, 달성률 115%),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수(19.3만명, 달성률 115%), 온종일 돌봄 이용학생 (39.7만명, 달성률 107%) 등
달성 (달성률 100%)	17개	공공보육 이용율(32.0%),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(8만명),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(7.5%) 등
보통 (달성률 90%~)	9개	1인당 정부재원 장학금 지원액(184만원, 달성률 99%), 사회 서비스 일자리 수 확대(14.9만명, 달성률 99%) 등

- 달성률 90% 미만인 미흡 지표는 2개(아이돌보미 이용가구, 친환경차 보급 수)로, 외부 요인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주 원인

< 미흡 성과지표 점검 결과 >

달성도	성 과 지 표	'18년 실적	'19			비 고
			목 표	실 적	달성률	
미흡	아이돌보미 이용가구	64,591	90,000	70,485	78%	• (사유)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신청인원이 예상보다 감소 • (조치계획) 아동학대 불안 등 해소를 위한 조치 마련(만족도 평가 도입, 자격정지 확대, 교육 강화 등)
	친환경차 보급 수	31,823	47천대	39천대	83%	• (사유) 다양한 신규모델 미출시에 따른 소비자 선택 제한, 전기차 보조금 감소(국비 1,200~800만원) 등 • (조치계획) 저공해차 보급목표제, 전기화물차 등 신규 차종 발굴 등을 통해 전년도 목표 미달분 분 조 기 만회

1. 주요 성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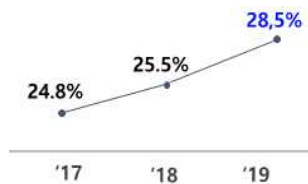
❖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'혁신적 포용국가' 사회 정책 노력으로 전반적인 생활여건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

* 생활여건의 변화 '좋아짐' 응답 비율: ('17) 41.1% ('19) 48.6%('19 사회조사, 통계청)

□ '기초생활'을 넘어 전 국민 '기본생활' 보장의 기틀 마련

- 돌봄·배움·일·노후 등 생애 모든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
- 국공립 유치원·어린이집 확충* 등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, 고교 무상교육·대학등록금 지원 확대로 교육비 부담 경감
- * ('18) 유치원 501학급·어린이집 574개소 → ('19) 유치원 약 1,000학급·어린이집 654개소

<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>



<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생 수 >



- 최저임금 상향·실업급여 보장 강화* 등의 추진으로 일하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한편, 여성의 역량 발휘를 위한 여건 마련**

* 지급수준 상향: 평균임금의 50→60%, 지급기간 연장: 최대 8 → 9개월 ('19.10.)

** 남성 육아휴직자 수: ('18) 17,665명 → ('19) 22,297명 (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21%)
경력단절여성 맞춤 취업지원 강화: 사례관리형 경력이음서비스 도입 ('19. 10개소)

- 노인일자리 확대·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등을 통해 노후가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,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서민의 주거마련 부담 경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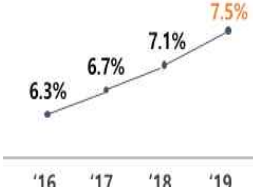
<정부지원 노인일자리 수>



< 노인 기초연금 수급액(월 최대) >



<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>



○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

- 중앙 집권적이며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해왔던 사회서비스를 수요자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지원 방식으로 재설계*하여 지원효과 제고

* 장애등급제 폐지('19.7.~), 지역사회 통합돌봄(커뮤니티 케어) 확대('19.6.~ 16개 지자체)

□ 혁신능력 제고를 위한 사람투자 확대, 일·학습·삶 연계 추진

○ 혁신의 기반으로 '인적자본'을 강조하여 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

-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다양한 인력양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창의성·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체제 혁신 노력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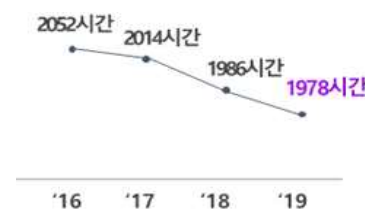
* AI 대학원 설치('19. 3교), 4단계 BK21 사업 추진,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신설('19, 연 500명 내외), 고교학점제 확대, '선취업 후학습' 경로 구축 등

○ 일·학습·삶의 연계로 쉼과 여유를 통한 혁신역량 제고 도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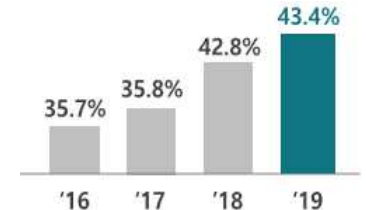
- 역량개발을 전 생애로 확산하기 위한 직업훈련·평생교육을 확대하고, 근로자 휴가지원·일터혁신 등 일, 배움, 휴식의 균형을 위한 토대 마련*

*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(고용보험 미가입자특고자영업자 등), K-MOOC 강좌 확대('18 510→'19 750개), 중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('18 1,508→'19 2,090건),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('18 2만→'19 8만)

< 연간 노동시간 >



< 평생학습 참여율 >



□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

- 장애인 자립지원*,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**,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·여성·다양한 가족 등에 대한 사회 포용성 강화

* 장애등급제 폐지 효과: 건강보험료 감면·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

** 공공기관 여성임원('17→'19 잠정): 11.8 → 20.8% / 여성 고위공무원: 6.5 → 7.9%

2. 한계 및 문제점

□ 「추진계획」 성과와 국민 체감도 간 괴리

- 각 과제의 성과지표 점검 결과 대부분 90% 이상 달성하고 있으나, 국민의 실제 정책 체감도와는 다소 괴리

< 성과지표와 정책 체감도 괴리 (예시) >

- ❖ 노후 지원 :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문화·체육활동 관련 목표는 달성하였으나, 노인 빈곤률 (43.8%, OECD 평균 13.5%) 및 사회적 고립도 높음 ('09년 56.8%, '19년 60.2%, 통계청)
- ❖ 일·가정 양립 :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목표는 달성하였으나,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이용률 격차는 큼 (300인 이상 62.2%, 10인 이상 4.6%, 5인 이하 1.3%, 고용부)

- 「추진계획」 상 성과지표가 주로 투입·산출 중심*으로 이루어져 있어, 수요자 관점 정책 효과 체감도 파악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

* (예시)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 수, 문화기반시설 수, 주민건강센터 개소 수

- 정책 수혜자 중심 부처 간 사업·정책 연계 및 협력사업 추가 발굴, 다양한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한 정책수요의 신속 반영 등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 불충분

□ 성과 점검 후속·장단기 점검 등 점검체계 보완 필요

- 추진 성과 점검 결과 분석 등을 통한 개선·보완사항을 향후 사회 정책 방향 수립·집행에 피드백하는 추진체계 불명확
- '포용국가 비전과 전략'이 중장기·거시적·종합적이기에 장기적 추세 평가, 사회정책·경제정책 간 연계 등에 대한 점검 긴급요

□ '혁신적 포용국가' 인지도 제고 필요

- '혁신적 포용국가' 전략과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가·현장 관계자·대국민 인지도 제고가 불가피하므로 체계적인 홍보 보완 필요

Ⅲ. 개선·보완 방안

① 국민 체감도 제고 성과점검 및 협업과제 발굴

- (성과지표 체계) 기존 투입/산출 중심의 지표 보완을 위해 결과(outcome) 중심으로 영역별 핵심 지표를 선정하여 성과 점검 시 병행 활용

- 현재 연구 중인 '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체계' 개발* 결과 반영

* 「추진계획」 성과목표(2274)와 연계하여 결과지표 체계 연구 중('19.6.~'20.3, 직능원)

< 영역별 기존 지표 vs 핵심 지표(예시) >

영역	기존 지표	핵심 지표
돌봄	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 확대	장애인 일상생활지원 수혜율
노후	노인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교실 운영	노인의 사회적 고립도, 노인의 사회단체활동 참여율

- (협업과제·대국민 인식조사) 사업·정책 설계 시 관계부처 간 공통의 정책수혜자를 중심에 두고 협업과제 발굴 실시

- 다수 민·관 기관 주관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종합 활용하며 '의제발굴 TF',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, 확정 추진

* 교육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정책보좌관·정책기획관 참여('20.1.17.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)

② 성과점검·추진체계 보완

- (점검 결과 반영) 보완·개선 사항을 차년도 사회정책 방향·전략 수립 등에 반영하여 점검 - 보완사항 도출 - 차기계획 수립의 체계 정립

- (거시적 점검) 정부 출범 3주년 계기 「추진계획」의 주요과제를 포함, 그간의 사회정책 추진성과를 포괄 점검하고 임기내 핵심 추진과제 제시

- 사회·경제구조의 복합·고도화에 따라 사회정책 - 경제정책 간 상호견인·연계방안 강구 필요

< 포용국가 사회정책 전략회의 개요(안) >

- ❖ (행사형식 / 날짜) 전략회의 개최 / '20. 상반기(잠정)
- ❖ (주요내용) ① 국제적 동향과 “혁신적 포용국가” 전략의 정합성
- ② 지난 3년간의 사회정책 성과와 한계 검토
- ③ 향후 핵심과제 및 중장기 사회정책 확대 방향

※ 사회정책 영역별(교육·복지·문화·환경·여성 등) 연구진 실무 작업반을 구성·운영 중에 있으며, 추후 부처 협의 개시 예정

③ ‘혁신적 포용국가’ 인지도 제고 홍보 강화

- 포용국가 비전·전략,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, 사람투자 10대 과제, 포용성장 국제적 논의 등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국민 참여 등 ‘포용국가 사회정책’ 홈페이지 확대 개편 (~'20.상반기)
-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 포럼을 통해 민간 전문가·현장 관계자·일반 국민 대상으로 사회정책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폭넓게 의견수렴
 - ※ 사회정책포럼(연4회) 및 포용국가포럼(사회정책 분과별 운영, 월1회) 등 개최
- 문체부 컨설팅('20.상반기)을 통한 범정부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, 국민 체감도가 높은 ‘삶의 영역’별 정책성과 시리즈 홍보 추진

Ⅳ. 향후 계획

- '20 ~ : 의제발굴 TF 운영(월1회)
- '20. 상반기 : 포용국가 사회정책 전략회의 개최(잠정), 포용국가 사회정책 홈페이지 개편
- '20. 12월 :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 '20년 추진현황 점검, 「2021년 사회정책방향」 수립·발표

붙임 1

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 주요 내용

□ 개요

- (목표)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국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제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로드맵
 - ※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면,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은 국민의 전 생애,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하려는 목표와 과제
- (내용) 삶의 영역(돌봄, 배움, 일, 쉼, 노후) 및 생활 기반(소득, 안전·환경, 건강, 주거·지역)의 각 영역별 정책 목표와 주요 정책과제

□ 주요 내용

- (삶의 영역) 돌봄, 배움, 일, 쉼, 노후 영역별 정책목표

영역	구분	정책 목표 및 핵심 메시지('22년의 달라진 국민의 삶)
돌봄	①	❖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보겠습니다. ↳ 영유아 10명 중 4명은 국공립 어린이집·유치원에 다니게 됩니다. ↳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.
	②	❖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↳ 성인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장애인은 주간활동서비스를 받게 됩니다. ↳ 확실히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, 장애인 개인이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	③	❖ 한부모, 미혼모,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놓치지 않고 보살피겠습니다. ↳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이 대폭 확대됩니다. ↳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, 사회적 편견도 줄어듭니다.
배움	①	❖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↳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지고, 대학생들이 더 많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. ↳ 공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이 강화되어, 교육 격차가 완화됩니다.
	②	❖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. ↳ 수업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됩니다. ↳ 혁신인재 12만 7천명이 양성되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됩니다.
	③	❖ 모든 성인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. ↳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. ↳ 중소기업·비정규직 노동자·자영업자 등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.
일	①	❖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하여 가족의 시간을 돌려드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겠습니다. ↳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. ↳ 임금식당 없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시간씩 늘어납니다.
	②	❖ 중소기업 근로자,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. ↳ 최저임금 준수 및 현장 인식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고, 노동자 간 임금격차도 줄어듭니다. ↳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됩니다.

	③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☞ 기업 문화 개선으로 근로자의 의견이 존중받고, 일터에서의 학습기회도 늘어납니다. ☞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늘어나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됩니다.
	④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. ☞ 민생 서비스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 국민들이 높아진 안전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됩니다. ☞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관행이 대폭 줄어들고, 일자리의 질이 높아집니다.
젊	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문화와 여가가 있는 생활을 찾아드리겠습니다. ☞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, 휴가 시간은 늘어납니다. ☞ 일터에서도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.
	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국민 누구나 동네 가까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 ☞ 모든 읍면동에 문화·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 동네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☞ 저소득층의 문화·스포츠 향유권이 대폭 확대됩니다.
노후	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☞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두 배로 늘리고,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. ☞ 문화로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고, 노후에도 문화체육활동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	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. ☞ 치매 부담비용이 절반으로 줄고, 모든 지자체에서 치매안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☞ 노인 4명 중 1명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.

○ (생활기반) 소득, 환경·안전, 건강, 주거·지역 영역별 정책목표

영역	구분	정책 목표 및 핵심 메시지 ['22년의 달라진 국민의 삶]
소득	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. ☞ 실업부조가 시행되어 근로빈곤층의 생계가 보장되고, 재취업이 원활해집니다. ☞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예술인 등 157만명의 노동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.
	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겠습니다. ☞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. ☞ 노년과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이 강화되고 생활이 어려워진 생계급여를 못 받는 바수급 빈곤층이 줄어듭니다.
환경, 안전	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 ☞ 노후 경유차와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가 줄어들어 미세먼지 환경이 개선됩니다. ☞ 유해 화학물질을 더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줄어듭니다.
	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☞ '3대 생명지킴이'를 통해 교통사고·산재·자살 사망자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 ☞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무시 관행 근절로 일상 속 안전사고 발생이 줄어듭니다.
	③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. ☞ 여성 폭력범죄 신고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. ☞ 아동학대 감시체계가 강화되고,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줄어듭니다.
건강	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국민 누구나 병역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☞ MRI, 초음파, 특진료,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의 2/3가 줄어듭니다. ☞ 저소득층이 경험했던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.
주거, 지역	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복지 환경이 마련됩니다. ☞ 장기공공임대주택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져 주거비부담이 완화됩니다. ☞ 모든 신혼부부가 주거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. [22년까지 88만쌍]
	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❖ 사는 곳 어디서나 생활이 편리하도록 다양한 돌봄·교육·건강 등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. ☞ 돌봄·교육·건강 등 기초생활인프라가 대폭 늘어나 동네는 도보로 10분, 먼 곳은 차로 30분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. ☞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농어촌에 대한 기본 생활서비스 지원이 늘어납니다.

붙임 2 「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」 영역별 주요성과

【돌봄】

- (아동) 국공립 유치원·어린이집 대폭 확충*, 39.7만 명 온종일 돌봄 지원**
 - * ('18) 유치원 501학급·어린이집 574개소 → ('19) 약 1,000학급·654개소
 - ** '19년 온종일 돌봄이용 대상 목표(37.2만 명) 대비 2.5만 명 초과 달성
- (장애인·가족)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으로('19.7.~) 공공서비스 수혜 기회 확대*,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**, 다문화학생 한국어학급 확대***
 - * 건강보험료 감면,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등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
 - ** ('18) 만 14세 미만, 월 13만원 → ('19) 만 18세 미만, 월 20만원
 - *** '19년 326학급(46%↑), 참여 학생·교사의 높은 만족도(5점 만점 : 학생 4.48, 담당교사 4.57)

【배움】

- (교육비) 고교 무상교육* 도입('19.2학기),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**
 - * 고3 47만명 대상 1인당 '19.2학기 학비(수업료·학교운영지원비) 약 75만원 부담 경감
 - ** 대학 입학금 폐지 법제화('19.10.), 대학생 68만명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('19)
- (인재양성) 대입일변도에서 벗어나 新성장경로*를 구축하고, 新분야 인재육성**
 - * '선취업 후학습' 지원 : (선취업) 9급 고졸채용('18 比 31%↑),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(2.55만명) (후학습) 후학습장학금 지원(9,100명), 후학습 선도형 전문대 선정(15교)
 - **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 수립(20.2), AI 대학원 신설(37개, 80명),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('19.12)

【일】

- (일·가정 양립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·배우자 출산휴가 보장('19.10.)*, 사례관리형 경력이음서비스 도입('19.10개소) 등 경단녀 맞춤 취업지원 강화
 - *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·단축분 급여인상,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유급 10일)
 - ※ 남성 육아휴직자 수 : ('18) 17,665명 → ('19) 22,297명 (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21.2%)
- (일터혁신) 공공부문 비정규직 19.3만명('17.7.~'19) 정규직 전환 결정, 사회서비스 일자리 9.3만 개 확충,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확대*
 - * 공공기관 여성임원 20.8%('19.12.잠정, '18 17.9%), 여성 고위공무원 7.9%('19.12.잠정, '18 6.7%)

【쉼】

- (일·휴식 균형)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('18 2만→'19 8만), 여가친화기업 인증 확대('18 31개→'19 44개) 등 일과 휴식의 균형 여건 마련
- (문화격차)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*,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('19. 2,865명) 등 취약계층 문화 기회 향유 확대
 - * 지원금 인상: ('18) 연 7만원 → ('19) 연 8만원 / 발급수: ('18) 159만 매 → 163만 매

【 노후 】

- (일자리) 사회서비스형* 2만개 신설을 포함한 **노인일자리 확대**(‘18 51만→‘19 64만)
*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(10개월, 월 59.4만원, 주휴수당 별도)
- (건강·돌봄) 전국 256개 보건소에 **치매안심센터 설치 완료***, 치매전문병동 확충(5→50개소), **지역사회 통합돌봄** 선도사업 추진(‘19.6~ 16개 지자체)
* 치매안심센터 이용 실적(‘18.3→‘19.9, 누적) : 심층상담 42 → 363만 건, 선별검사 35 → 394만 건

【 소득 】

- (고용안전망)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 도입(‘20.下 예정),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(지급수준 상향: 평균임금의 50→60%, 지급기간 연장: 최대 8→9개월(‘19.10.))
- (사회안전망) 아동수당의 **보편적 지급화***, 기초·장애인연금 조기 인상**(‘19.4.),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로드맵 조기 시행(‘19.1.) 등
* (아동수당) 소득·재산 기준 폐지(‘19.1.), 수혜연령 확대(6→7세, ‘19.9)로 269만 명 지원(‘19.9.)
** 대상: (기초) 소득 하위 20% (장애인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/ 지원액: 25→30만원 (당초 목표 ‘21년)

【 건강 】

- 초음파·MRI 등의 비급여 항목 **급여화**, ‘지역의료 강화대책’ 수립(‘19.11.) 등 필수의료 분야 지역격차 해소 추진*
* 10개 권역 국립대병원 대상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실시(30억원)

【 환경·안전 】

- (환경)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**국가재난으로 지정**(‘19.3.) 및 **추진체계 구축*** 등 추진, **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공개 확대**(1,143→1,694종)
*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발족(‘19.2),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(‘19.4),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마련(‘19.10.)
※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(PM2.5) : ‘16 26μg/m³ → ‘19 23μg/m³
- (안전) **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** 추진을 통한 사고 사망자수 감소*, 여성폭력 피해자 종합 지원을 위한 **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출범**(‘19.12.)
* 교통사고 사망자 수 : (‘18) 3,781명 → (‘19) 3,349명, 산업재해 사망자 수 : (‘18) 971 → (‘19) 855명

【 주거·지역 】

- **주거급여 대상 확대**(중위소득 43→44%, 74.2 → 104만명) 등 서민의 주거 마련 부담 완화, **도시재생 뉴딜사업**(‘18 100→‘19 116곳) 등 지역인프라 강화*
* 건강생활지원센터 : (‘18) 66 → (‘19) 75개 / 농촌 집고쳐주기 : (‘18) 326→(‘19) 1,081가구

붙임 3

포용국가 사회정책 2020년 주요 추진 계획

분야	주요 추진 과제	주요 발표 계획
돌봄/배움	▶ 사립유치원 K-에듀인인 전면 도입(‘20.3~) ▶ 온종일 돌봄서비스 40.8만명 제공 ▶ 고교 무상교육 확대(고3→고2·3) ▶ 고졸취업 지원(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신설,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 등) ▶ AI 대학원(신규 3개), 8대분야 SW 인력 1,700명 양성 4단계 BK21 추진	▶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계획 수립(‘20.10월) ▶ 다문화학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(‘20.2월) ▶ 「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」 수립 및 세부 이행계획 마련(4/4분기) ▶ ‘20학년도 국가장학금, 근로장학금, 우수 장학금 계획 수립(1/4분기) ▶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계획(‘20.4월)
일/임	▶ 상권르네상스 지원규모 확대(상권당 80억 원 → 상권당 60~120억 원) ▶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(2,200건) ▶ 사회서비스 일자리 9.5만개 신규 창출, 사회서비스원 확대(4→11개) ▶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(8→9만원) 국민체육센터 160개소 신규 지원	▶ 「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(‘18~‘22년)」 ‘20년 추진계획 수립(‘20.3월) ▶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(2/4분기) ▶ 여가친화기업 인증 ‘20년 사업계획 수립(‘20.1월)
노후	▶ 노인일자리 74만개 추진,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확대(5→10개 지역) ▶ 치매전문병동 7개소 추가 설치, (가칭)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 추진	▶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‘20년 사업계획 수립(‘20.1월) ▶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(‘20.1월~)
소득/건강	▶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(‘20.下 예정) ▶ 기초연금(소득하위 40%), 장애인연금(기초차상위) 월 최대 30만원 지원 ▶ 중증장애인 수급권자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▶ 건강보험 적용(여성생식기 초음파(2월), 흉부 초음파(8월) 등)	▶ 제2차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마련(‘20.4월) ▶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(‘21~‘23) 수립(‘20.7월)
환경·안전/주거·지역	▶ 대기관리권역 확대(수도권→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 추) 및 총량제 시행(‘20.4) ▶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(‘20.1.) ▶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출범·운영 ▶ 12개 권역 및 15개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실시(3월~) ▶ 공공임대주택 14.1만호 공급,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신규 선정(50개 내외)	▶ 「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(‘20~‘24)」 ‘20년도 세부추진계획 마련 ▶ ‘20년 안전문화진흥사업 추진계획 수립(1월) ▶ ‘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마련(‘20.12월) ▶ ‘20년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·계층별 공급계획 수립(‘20.3월) ▶ ‘20년 농촌지역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사업계획 수립(‘20.1월)